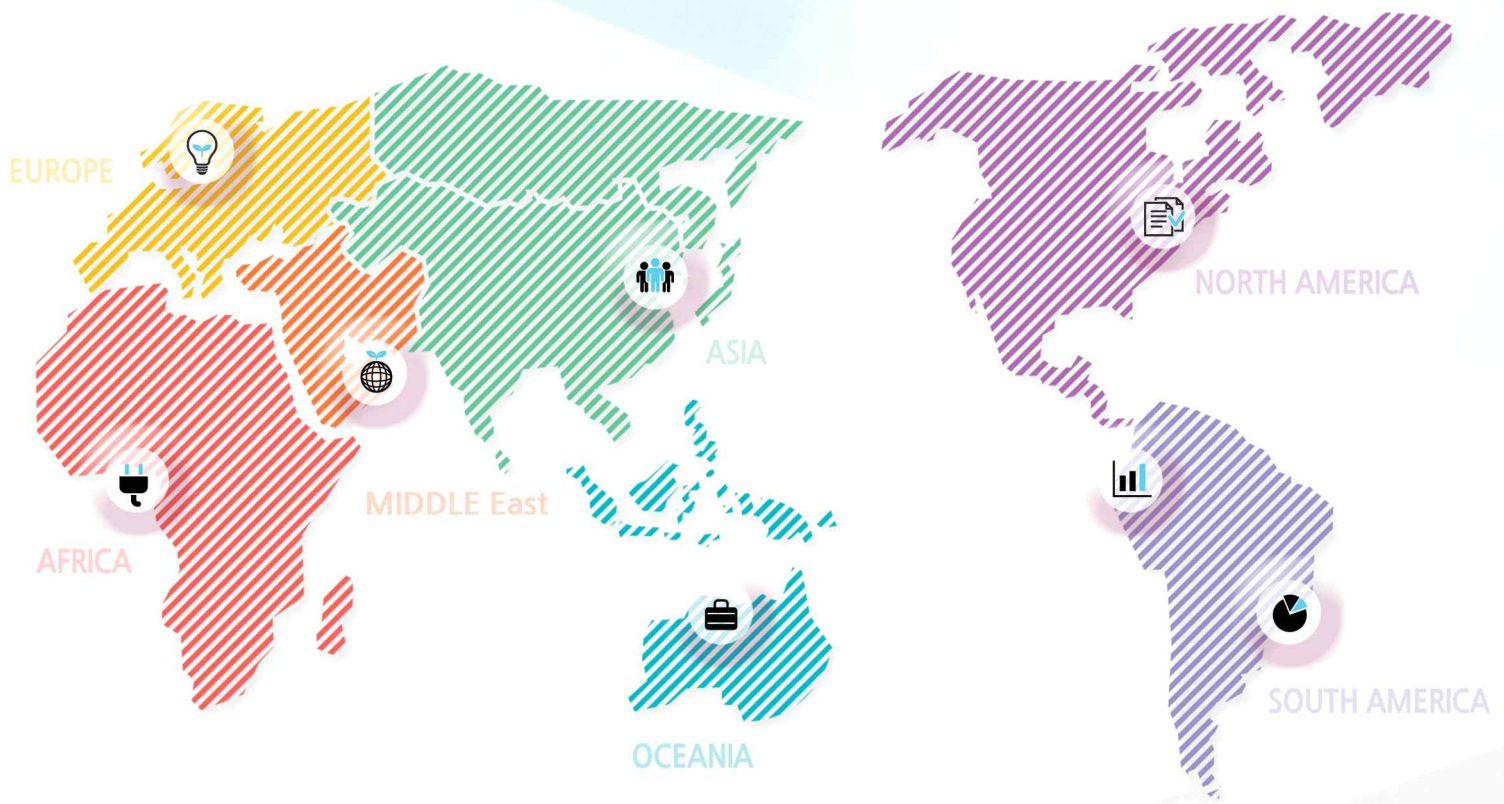




일본의 TPP 협상 결과와 대응정책 분석

목 차

요 약

I. 일본 FTA 추진전략의 변화와 특징 1

- 1 1. 일본의 FTA 추진전략의 변화
- 3 2. 일본 기발효 FTA의 특징과 과제

II. 주요 쟁점별 TPP 협상 결과 7

- 7 1. 상품무역
- 8 2. 원산지 규정
- 10 3. 투자·서비스 분야
- 12 4. 정부조달 분야

III. TPP 협정의 경제효과와 일본의 대응정책 14

- 14 1. TPP 협정의 경제효과
- 16 2. 일본 TPP 대응정책의 주요 내용

IV. 시사점 19

요 약

- 일본의 TPP 추진목표 및 협상결과, TPP 타결이후의 경제효과 및 대응정책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추진목표) 일본의 TPP 참여 목표로서 낮은 FTA 무역비중 극복,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규제개혁의 기폭제 활용, 세계 무역투자 규범 구축을 강조
 - (협상결과) 원산지규정, 투자·서비스, 정부조달 분야에서 일본의 양자간 FTA 한계를 보완하고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협상결과가 도출
 - (경제효과) TPP 경제효과는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와 비관세장별 해소로 일본의 GDP 규모가 13.6조 엔 인상될 것으로 추정
 - (산업별 영향) 수송기계, 섬유의류에서 긍정적 영향, 농림수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
 - (대응정책) 일본정부가 11.25일 발표한 TPP 대응정책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해외전개지원이 핵심
- 우리로서는 TPP 발효시점까지 TPP와 연계된 성장전략 수립, TPP 참여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TPP라는 대외경제 변수를 활용하여 규제개혁 가속화, 생산성 향상, 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성장전략 수립이 최우선
 - TPP 참여로 중견·중소기업들이 누적원산지 적용, 서비스·투자 환경개선, 정부조달 양허확대 등 TPP 협상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GVC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전망
 -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투자환경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이들 국가와 발효 중인 양자간 FTA 활용을 통해 경제효과 증대방안 모색
 - TPP 참여에 대비하여 농림수산물에 대한 추가개방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

I

일본 FTA 추진전략의 변화와 특징

1. 일본 FTA 추진전략의 변화

□ 일본의 FTA 정책은 목표, 대상국, 포괄 범위, 개방수준 차원에서 크게 변화, 그 결과 한국의 FTA 정책과 유사

- (목표) 자국기업의 해외비즈니스 원활화 및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 (대상국) 韓: 미국, EU, 중국, 인도, ASEAN, 호주 등 주요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 → 日: 동아시아 역내 중시에서 거대선진경제권 중시로 전환
- (포괄범위) 상품무역 위주에서 무역·투자 규범, 국유기업 등을 포괄
- (개방수준) 제조업: 높은 수준, 농업: 중간수준 → 전산업 높은 수준

□ 일본의 FTA 정책기조 변화 요인

- 일본이 한국과의 FTA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우려, 국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폭제로 FTA 활용, TPP 참여로 정치경제적 효과를 기대

<표 1> 한국과 일본의 FTA 정책 비교

	한국의 FTA정책		일본의 FTA정책	
	'03년 FTA 로드맵	'13년 신통상로드맵	'04년 기본방침	'10년 기본방침
목표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선진통상국가 실현)	지역통합의 중심 핵심축 구축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높은 수준 FTA 추진 과 국내개혁 병행
주요대상	미국, EU, 중국 거대경제권 중시	신흥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자원부국 중 시	동아시아 (ASEAN)중시	TPP, EU, RCEP 등 메가 FTA 중시
포괄범위	선진 경제권과 포괄적 추진	산업, 자원·에너지 협력 포괄	상품무역 위주	TPP, 일-EU FTA는 포 괄적
개방수준	높은 수준	국가별 맞춤형	제조업: 높음 1차 산업: 중간수준	전 산업 높은 수준

자료: 김양희(2012). 「TPP와 동아시아의 'FTA 도미노 효과」」를 토대로 추가 작성

□ 일본정부는 '14.6월 「일본재흥전략」에서 메가 FTA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여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

- 동 전략에서는 메가 FTA 협상의 목표로서 세계 무역·투자 규범 구축, 일본 기업의 효과적인 FTA 활용, 대외경제관계 발전, 국내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시
- (TPP) 일본의 TPP 참여는 한·미와 한·EU FTA 추진에 자극을 받고 자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국을 견제하고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을 목표
- (일·EU) 일·EU FTA에서 EU는 관세를 완화·철폐하는 대신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철폐 요구
 - 일본은 대외적으로 메가 FTA에서 제기되는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으로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 * EU는 일본측에 대해 사업환경(22건), 금융(12건), 운수·통신(15건), 의료·위생(23건), 소비재(13건), 산업규제(28건)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해소를 제기
- (RCEP) 일본기업의 부품조달 공급네트워크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RCEP의 중요성은 복잡한 원산지규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강조
 - * RCEP은 ASEAN+1이라는 FTA 형태에서 파생, ASEAN 10개국을 허브로 하며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이 참여
 - * 동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역내부품 조달 현황은 RCEP 비중이 90%를 상회

<표 2> 일본의 메가 FTA 추진 전략 비교

	TPP(12개국)	일·EU FTA	RCEP(16개국)
추진 현황	· '11.11월 협상참가 표명 · '13.7월 TPP협상 참가 · '15.10월 협상 타결	· '13.3월 협상개시 선언 · '15.10월 13차 협상 개최	· '12.11월 협상개시 선언 · '15.10월 10차 협상 개최 · 연내 타결 목표
협상 쟁점	· 예외 없는 관세철폐 · 경쟁정책(일본 우정성) · 지식재산권	· 비관세장벽 철폐 (자동차, 화학, 전자기기, 식품안전, 가공식품 등)	· 개방수준(중위 또는 저위) · 포괄범위
일본 협상 목표	· 중국 견제 · 일본기업의 경쟁력 확보 · 개방을 통한 제도개혁의 기폭제로 활용	· EU시장에서의 일본기업 경쟁력 확보 · 비관세장벽 논의를 일본 규제개혁 지렛대로 활용	· 국가 간 통일된 원산지기 준적용 · 일본기업의 역내 생산네트워크 효율화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일본의 기발효 FTA의 특징과 과제

가. FTA 발효국과의 낮은 무역비중, 메가 FTA 추진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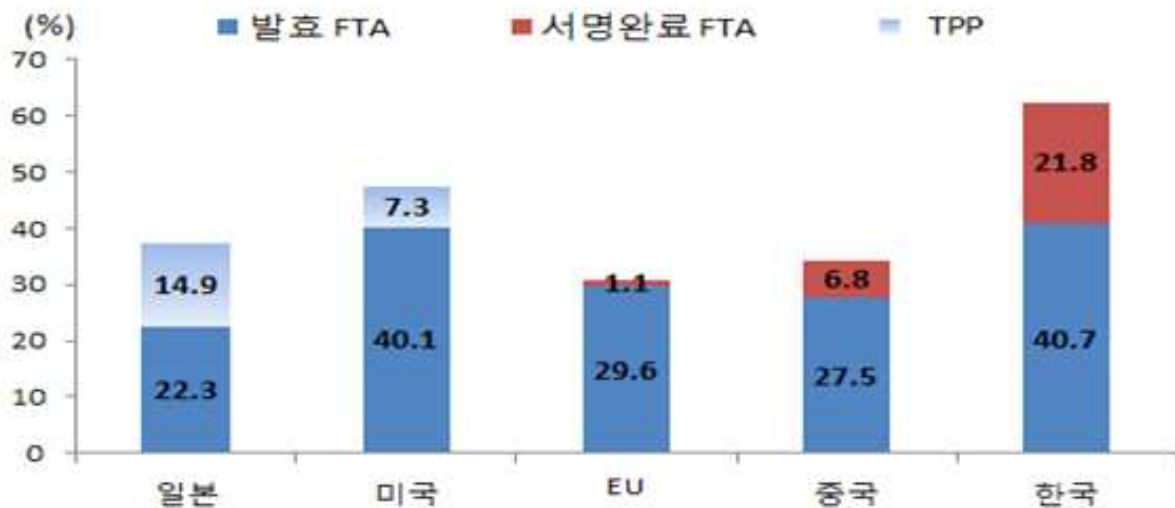
□ 일본의 FTA 발효국과의 낮은 무역비중은 일본이 TPP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동인으로 작용

- 주요국의 FTA 무역비중(2015년 발효 기준)을 비교하면, 일본(22.3%)은 한국(40.7%), 미국(40.1%), EU(29.6%), 중국(27.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일본정부는 「일본재흥전략」을 통해 FTA 무역비중을 '20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수립

- TPP 체결이후 일본의 FTA 무역비중은 22.3%에서 37.2%로 상승
- 향후 협상 중인 EU(9.8%), 한중일(25.8%) 등의 FTA가 발효될 경우, 일본의 FTA 무역비중은 8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경제산업성, 2015)

<그림 1> 주요국의 FTA 무역비중 비교



주: TPP 협정 체결에 의한 무역비중은 일본(2015.3.21. 재무성 무역통계), 미국(2015.4.27. IMF 통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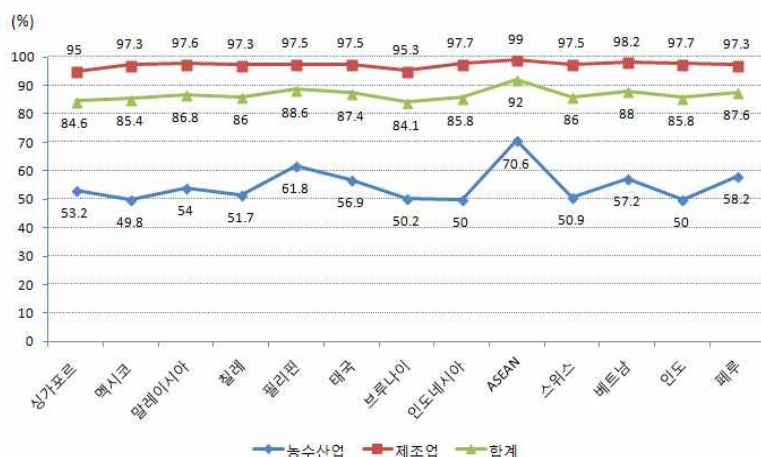
자료: TPP政策大策本部(2015).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概要」.

나. 농림수산업 시장보호 기조를 관철, 이로 인해 낮은 양허수준

□ 일본은 FTA 협상의 대전제로서 경쟁력이 강한 제조업에서는 전면 시장개방을, 농림수산업에서는 철저한 시장보호 정책기조를 견지

- 일본의 철저한 농업보호 전략은 협상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기발효 FTA의 국별 양허현황(13개 평균)을 보면, 농림수산업(55%)과 제조업(97.3%)의 격차가 큰 결과, 전체 양허율은 86.8% 수준에 불과
 - * 일본의 기발효 FTA 분석 대상국(13개)에는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가 포함. '15년 1월 발효된 호주는 대상에서 제외됨.
 - * '관세철폐' 비중(13개 평균)을 비교하면,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32.5%, 94%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3.3배나 높은 수준
- 기발효 FTA에서는 834개의 농림수산품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견지되었고, 그 중에서도 육류·낙농이 최대 민간품목으로 보호됨.
- <그림 2>의 농림수산업 양허율을 보면, 쌀이 포함된 곡물·과채는 77.5%의 양허율로 높은 반면, 쇠고기·돼지고기·낙농제품이 포함된 육류·낙농은 37.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그림 2> 일본의 기발효 FTA의 국별 · 농림수산업의 양허율



13개국 평균	농림수산업 양허율
곡물과채	77.5%
수산물	49.1%
식품	54.7%
육류·낙농	37.1%
평균	55.0%

자료: 김규관·이형근·김은지(2014).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다. FTA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제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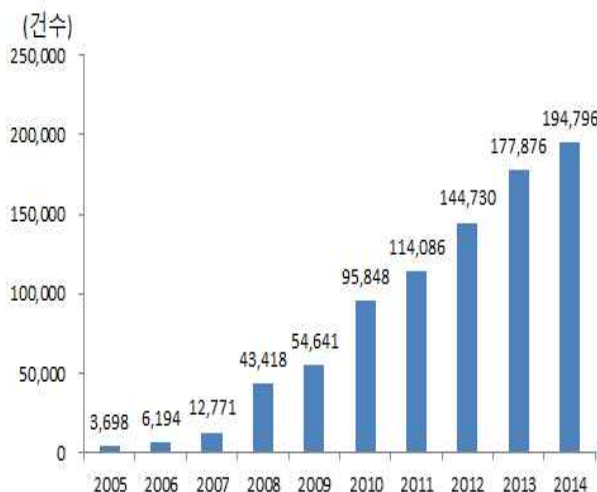
□ 일본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은 FTA 발효 건수에 대응하여 증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은 '05년 3,698건에서 '14년 197,796건으로 증가
- '14년 FTA 체결국별 발급실적은 태국이 34.5%(68,303건)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22.3%, 44,199건), 인도(15.7%, 31,032건) 순으로 집계

□ 일본 해외진출기업의 FTA 활용률도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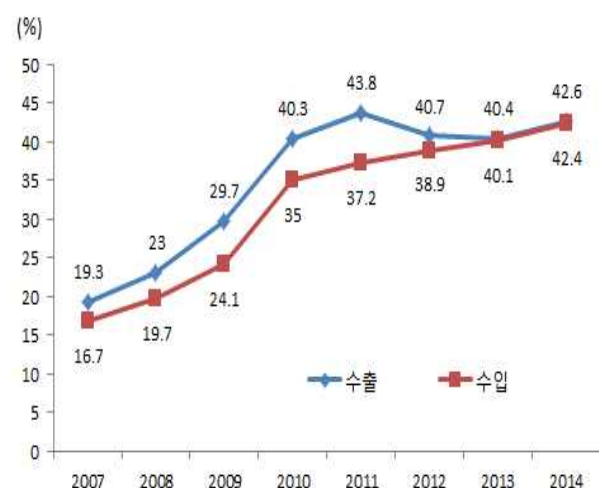
- 2006~09년 기간에 발효된 ASEAN 국가와의 FTA에서는 양허안에 기초하여 관세철폐가 진행
 - 자동차 및 부품, 철강의 경우 발효 이후 5년 시점부터 무관세로 적용되는 품목 수가 많아짐에 따라, FTA활용률이 증가세를 시현
- ASEAN 진출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수출 기준)은 '07년 19.3%에서 '14년 42.6%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그림 4)
- * 2014년 실시된 조사는 아시아·오세아니아(동북아시아 5개국, ASEAN 9개국, 서남아시아 4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4,767社를 대상으로 실시

<그림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자료: 經濟産業省(2014). 「The Number of CO Issued in Japan」.

<그림 4> ASEAN 진출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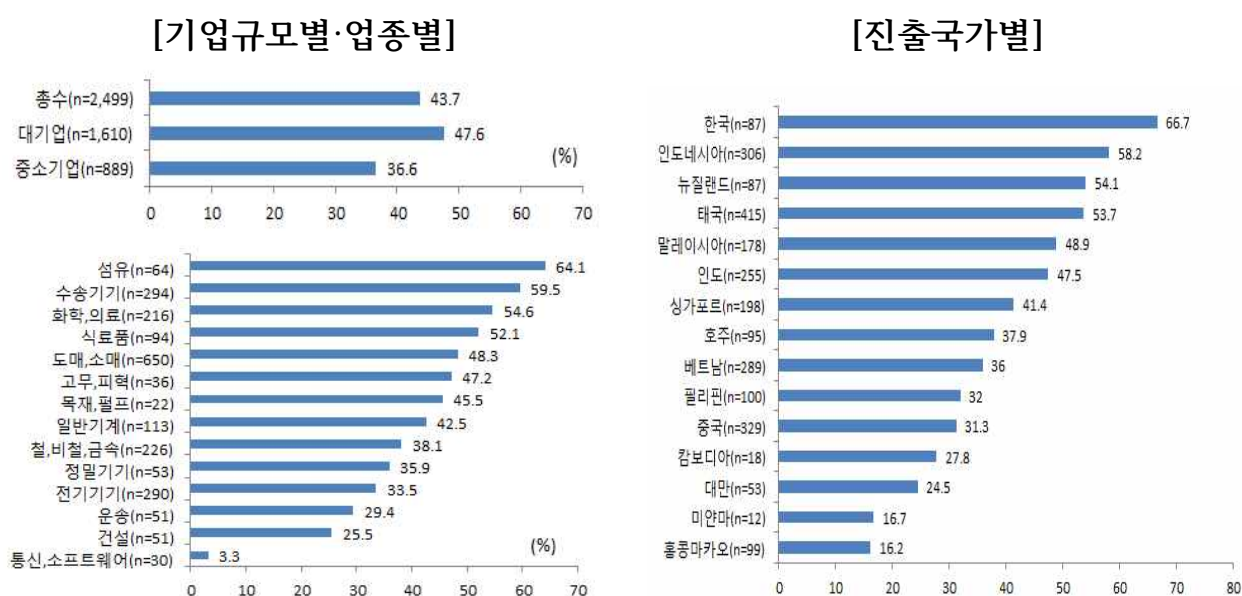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4). 「在アジア・オセアニア日系企業實態調査」.

□ FTA활용률은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

- (기업규모별) 대기업이 47.6%, 중소기업이 36.6%를 기록,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낮은 수준
- (업종별) 섬유(64.1%), 수송기기(59.5%), 화학·의료(54.6%), 식료품(52.1%) 업종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집계
- (진출국별) 한국이 66.7%로 가장 높고, ASEAN 역내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태국이 5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

<그림 5> 아시아진출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주: n은 각 국가별로 수출입을 시행하는 일본기업 수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14). 「在アジア・オセアニア日系企業實態調査」.

□ 아시아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 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수의 FTA 협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별로 원산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
- 원산지규정이 동일하다 해도 제3자 증명제도 방식으로 인해 복잡한 심사 취득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
- 누적규정 제도절차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체결국 또는 담당자별로 해석의 차이가 발생

II 주요 쟁점별 TPP 협상 결과

1. 상품무역

□ 일본의 총 2,328개 농림수산물 중 관세철폐 비중은 81%를 기록

- 전체 농산물 중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19%(443개 품목)를 차지, 주요 5대 품목(412개 품목) 대부분이 포함

<표 3> TPP에서의 농림수산품의 양허율

	품목세번수	즉시철폐	2~11년 철폐	12년 이후 철폐	철폐 예외 (TRQ·삭감)
일본	2,328개	51.3%	27.5%	2.2%	19.0%
11개 평균	-	84.5%	12.3%	1.7%	1.5%

자료: 農林水産省(2015.10.20). 「TPP交渉, 農林水産分野關係追加資料」

□ 일본은 TPP 협상에서 주요 5대 농산품에 대해 TRQ 설정을 통해 현행 관세율을 유지

- (쌀) 미국, 호주에 대해만 TRQ 설정, 현행 세율(미국 341엔/kg) 유지
 - 미국(5만 톤→13년차 7만 톤), 호주(6천만 톤→ 13년차 8,400만 톤)
 - *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는 관세할당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무관세로 수입하고, 관세할당 범위에서 벗어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
- (밀·보리) 현행 국영무역제도를 유지하면서 TRQ를 신설
 - * 국영무역제도는 관세할당 틀 내에서는 무관세로 수입한 다음 관세상당치에 해당되는 일종의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인 'mark-up'을 추가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키고, 관세할당을 벗어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과 'mark-up'을 부과하는 제도
-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인하 및 세이프가드 신설
 - 쇠고기 세율을 38.5%에서 16년차 9%로 인하, 돼지고기는 차액관세제도 유지
 - * 차액관세제도는 수입가격과 국내 기준수입가격과의 차액을 그대로 관세로 징수하는 제도
- (유제품) TRQ 설정, 현행 세율 유지(TRQ내 관세는 11년차까지 철폐)
- (설탕) 가당조제품(초콜릿)의 경우 TRQ 설정범위를 6.2만 톤에서 9.6만 톤(품목별로 6~11년차)으로 확대

□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11개국 전체 기준으로 99.9%의 관세철폐를 달성

- 일본의 공업제품에 대한 즉시철폐 비율은 TPP 체결국별로 미국(39%→67%), 캐나다(47% → 68%), 뉴질랜드(79% → 98%)가 상승

<표 4> TPP에서의 공산품 양허율

	즉시철폐율		관세철폐율	
	품목수 기준	무역금액 기준	품목수 기준	무역금액 기준
일본측	95.3%	99.1%	100%	100%
11개국 전체	86.9%	76.6%	99.9%	99.9%

자료: 經濟産業省(2015.10). 「TPP協定における工業製品關稅に關する大筋合意結果」

- TPP 발효시점 기준으로 주요 시장에 대한 우리의 시장선점 효과는 유지되겠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한·일 간 경쟁심화가 불가피
 - *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에서 10년 이내 철폐, 미·일간 TPP에서 25년 장기철폐(현행 세율 2.5%를 20년차 1.25%, 22년차 0.5%, 25년차 2%로 삭감)를 적용. 자동차는 우리의 시장선점 효과가 유지될 전망
 - * 가전, 산업용기기, 화학 분야의 경우 일미 TPP에서 99% 이상 즉시철폐를 실현한 반면, 한·미 FTA에서 10년 간 장기 관세철폐가 적용. 한·일간 경쟁 심화 전망

2. 원산지 규정

가. 섬유관련 원산지 규정

□ 원산지 누적기준은 원사기준 채택 및 공급부족목록 허용

- TPP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완전누적 규정이 도입되어 역내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누적원산지규정, 통관제도의 조화로 비관세장벽 완화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예상
 - * 원사기준(yarn forward) : 역내 국가에서 방적공정을 통해 생산된 원사를 재료로 제직·편직 공정을 통해 직물을 생산하고, 직물을 재단봉제하는 등 3단계 이상의 변형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
 - * 공급부족목록(short supply list) : 원사기준의 예외규정으로 역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품목에 대해 역외 조달을 허용

□ 국별 전망

- (베트남) 원사기준 채택과 미국의 고관세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섬유·의류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핵심축이 될 전망
 - TPP 역외국(중국,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조달하기보다 역내국에서 원사·원단의 생산부터 봉제까지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전개
 - TPP 역내·역외국의 對베트남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재 강점을 보유한 봉제뿐만 아니라 섬유소재 생산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전망

<표 5> TPP 역내·역외국의 베트남 투자 계획

국가	업체	내용
일본	이토추 그룹	· 일본 섬유 중점 종합상사로 국영기업인 Vinatex와 섬유 원자재 분야 업무 제휴
홍콩	Texhong Textile Group	· 원사·직물 생산기업으로 TPP 대비 8억 달러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
중국	Shenzhou International Group	· 니트 의류 생산기업으로 TPP 대비 Worldon Vietnam 이름으로 3억 달러 규모 투자 진행
대만	Yulon Group, Tal Yen Textile	· TPP 대비 방직, 염색, 의류 봉제 공장 추가 투자 계획

자료: KOTRA(2015). 「TPP 협상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미국) 미국의 주요 수출국인 멕시코, 캐나다 등이 원부자재 조달을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할 것을 우려
 - 對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에 대한 미국산 원사·원단 수출 감소 우려
 - 일본산 고가 기능성 원단, 산업용 섬유 수입 증대에 따른 피해 예상
- (일본) TPP 회원국들의 일본산 원자재 수입전환 가능성을 기대
 - 일본산 원자재 가격이 비싸도 최종재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 혜택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일본 업계 측 설명

나.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 자동차 부품 55% 이상이 역내에서 조달되는 경우 관세철폐 대상으로 인정하는 누적원산지 규정 도입

- 부가가치 산정방법 중 하나인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따라 TPP 역내에서 조달한 부품 가치가 자동차 가격의 55%이상이면 자국산으로 인정

* 공제법은 비원산지 재료의 부가가치를 제품가격에서 공제하는 방식

- (일본) 자동차제조업체는 이미 동남아시아와 멕시코에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對미 수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
- (베트남) 자동차부품업체가 일본이나 미국 자동차제조업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여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국뿐만 아니라 역외국의 對베트남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음.

<표 6> TPP 역내·역외국의 베트남 투자 계획·진행

국가	업체	내용
일본	Toyota, Honda	· 반조립제품 생산
프랑스	PSA Peugeot Citroen	· 베트남 최대의 자동차생산업체인 THACO Group과 협력을 통해 생산 시작
중국	DongFeng Motor	
인도	Tata Motors	· TMT Motor JSC와 반조립제품 생산을 위한 협력 체결
러시아	KamAZ	· 조립생산을 위해 베트남 국영회사인 VINACOMIN과 합작 투자

자료: Business Monitor Online

3. 투자·서비스 분야

☐ 투자·서비스 분야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의 투자환경 개선 기대

- 높은 수준의 투자기준을 수용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일본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 향상
 - * 설립 전(pre-establishment) 투자자 보호, 외국인투자자의 설립·인수 등에 관해 특정 이행요건(PR) 금지, 고위경영진과 이사회(SMBD)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 도입

☐ (베트남) 투자관련 20개 분야 이상 외자규제 철폐·완화

- (금융) 현지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 상한을 15%에서 20%로 인상
 - 일본 은행의 아시아진출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효과를 기대
- (시청각) 베트남 영화 의무 상영 스크린 수 최저 1개로 감소

<표 7> TPP에서 투자·서비스 분야 협상 결과

	TPP 협상 이전	TPP 협상 이후
베트남	(시청각) · 18~22시까지 베트남 자국영화 상영	· 18시~22시까지 최저 1개의 스크린만 베트남 자국영화 상영
	(오락·문화) · 극장, 라이브하우스, 서커스에 대한 외자 출자는 49% 이하 · 전자게임 : 외자 출자 49% 제한	· 합작투자나 주식보유 제한을 51%로 상향 · 전자게임 : 외자 출자 제한 철폐(발효 5년 이후)
	(유통) · 소매서비스 매장 설립을 위해 경제수요조사 심사 필요	· 소매서비스 매장 설립의 경제수요조사 심사제한 철폐(발효 5년 이후)
	(금융) · 외자출자 규제 15%	· 외자출자 규제 20%로 완화
말레이시아	(금융) · 외자은행의 점포외 신규 ATM 설치 금지	· ATM 설치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
	(건설) · 외국건설기업의 참여 프로젝트 제한	· 외국건설기업 참여 프로젝트 제한 규제를 철폐
	(유통) · 미개방	· 외국 대형할인점, 편의점의 소유권의 30%는 말레이시아 자국민 소유 · 자국산 물품 비중 30%
브루나이	(광고서비스) · 외자의 광고 서비스 출자 30% 이하	· 외자의 출자규제를 철폐

자료: 日本經濟新聞(2015.11.11). 「TPPでこう変わる」 및 TPP 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 (IT) 외국기업에 대한 자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규정을 폐지
 - 일본기업은 자국 내에서도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한 개척이 가능
- (유통) 소매서비스 매장 두 번째 출점에 대한 경제수요조사(Economic Needs Test)를 발효 5년 이후 철폐,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점포를 확대하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 ENT 평가 항목 : 현지 유통매장 수, 시장안전성, 인구밀집도, 해당지역 개발계획과 투자계획간 상호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

□ (말레이시아) 미개방 분야의 일부 개방과 기존 규제 완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 (건설) 외국건설업체의 프로젝트 참여 제한조치가 철폐됨으로써 향후 외국건설업체의 프로젝트 참여가 확대될 전망

- (유통) 개방하지 않았던 유통서비스를 일부 개방
 - 외국 대형할인점, 편의점 외국자본의 30% 출자가 가능
 - 부미푸트라 정책의 일환으로 진열 제품 중 최소 30%는 말레이시아 자국산 물품 충족 의무
 - * 부미푸트라는 말레이시아 국민 중 말레이계 원주민에 대한 우대정책으로서, 경제 분야에서 중국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린 말레이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
- (금융) 외국은행의 점포설치 수 상한을 8개 지점에서 16개 지점으로 확대
 - ATM 신규 설치 규제 철폐

□ (선진국) 새로운 외자규제 완화효과는 제한적

- 정부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투자금액 상한액을 인상, 이를 통해 일본기업은 해외 중규모 M&A시 현지 당국과의 절차 부담을 경감
- 투자금액 상한액은 호주(215억 엔→950억 엔)와 캐나다(340억엔→ 1,400억 엔)가 인상

□ TPP 역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

- 사업상 방문자의 체류기한을 캐나다(90일→ 6개월), 멕시코(30일→6개월), 페루(90일→183일)가 연장
- 투자자 체류기한은 멕시코(1년, 3회 연장 가능), 베트남(90일→ 1년)이 연장

4. 정부조달 분야

□ TPP 협상을 통해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신규 체결, 입찰기준 인하, 개방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성과가 도출

- 일본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와 체결한 기존의 양자간 FTA에서도 포함하지 못했던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과 동등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도출
 - 이들 3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국민우대와 무차별원칙 등 정부조달 규정의 기본원칙과 상세한 적용범위를 처음으로 규정

- TPP 협정에서는 WTO GPA 규정 수준을 상회하는 정부조달 양허내용이 포함
 - 민간투자사업(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일부 형태인 건설·운영·이전에 관한 계약(BOT: Build Operate Transfer)이 양허대상으로 추가
 - 호주 수도교통공사와 캐나다 사회자본청이 개방대상 기관으로 추가됨.
 - 이에 일본기업의 TPP 역내 인프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8> 정부조달시장의 협상 결과

	새롭게 개방된 기관 및 서비스
베트남	- 중앙정부기관, 베트남통신사(Vietnam News Agency), 호치민 국가정치학원(National Academy of Politics), 사회과학원(Academy of Social Science), 과학기술원(Academy of Science) 4개 기관 및 34개 공립병원
말레이시아	- 중앙정부기관, 투자개발청(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무역개발공사(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중소기업공사(SME Corporation), 생산성공사(Productivity Corporation) 4개 기관(그 외 보건성 산하 공립병원, 교육성 산하 공립학교 포함)
브루나이	- 중앙정부기관, 브루나이 통화금융청(Authority Monetary Brunei Darussalam), 피고용자신탁기금(Employee Provident Fund)
호주	- 교통안전국(Transport Safety Bureau), 구 국회의사당(Old Parliament House), 수도교통공사(Capital Metro Authority), Tourism Tasmania 4개 기관 - 법률 서비스,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및 운수 서비스를 추가
캐나다	- 사회자본청(Office of Infrastructure Canada), 공유서비스청(Shared Service), PPP 캐나다, 온타리오 남부경제개발청(Federal Economic Development Agency), 대서양 해운(Marine Atlantic Inc.), 검찰청(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국립영화제작청(National Film Board), 북방경제개발청(Norther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환경영향평가청(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인권박물관(Museum for Human Rights) 등 약 30개 기관 - 자동차수리서비스, 인재파견서비스 등을 추가
싱가포르	-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Board), 카지노규제청(Casino Regulatory Authority), 공무원 연수소(Civil Service College), 싱가포르 경쟁법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건강증진위원회(Health Promotion Board), 호텔인허가청(Hotels Licensing Board), 국가예술평의회(National Arts Council), 과학센터(Science Centre Board), 토지관리국(Land Authority) 10개 기관
미국	- Denali 위원회(Commission) 및 일부 전력기관, Bonneville 전력공사 (Power Administration), 서부지역전력공사(Western Area Power Administration), 남동부 전력공사(Southeastern Power Administration), 서남부전력공사(Southwestern Power Administration), 지방공익사업공사(Rural Utility Service)

자료: 内閣官房(2015.12.24). 「TPP 協定の經濟効果分析」

III

TPP 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일본의 대응전략

1. TPP 협정의 경제적 효과

□ 일본정부는 12.24일 「TPP 협정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TPP 발효에 따른 경제효과가 13.6조 엔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 일본정부는 TPP가 발효되면 관세인하는 물론 무역원활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 효과가 발생하여, TPP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13.6조 엔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함.

* 이번에 추정된 13.6조 엔은 2014년도 GDP 실적(524.7조 엔)의 2.59%에 해당됨.

- 일본 내각부는 TPP 협상 참가이전 시점('13.3월)에 TPP 참여의 경제효과가 3.2조 엔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한 바 있음.

- 이 수치는 관세철폐 효과만을 추정한 것으로서, 무역원활화와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TPP 타결로 무역·투자 확대, 생산성 상승, 고용증가 효과를 기대

- 일본정부는 TPP의 경제효과가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른 무역비용감소 뿐만 아니라, 투자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소득과 투자 증가로 연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

- 구체적으로 TPP에서 신속통관, 급송화물, 서면사전고시, 수출입절차의 자동화 등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포함됨. 이에 따라, 통관 절차의 신속화·투명성이 확보

* 신속통관은 관세법을 준수하여 기간 이내(가능한 화물 도착시 48시간 이내)에 인수를 허가하는 규정

* 급송화물은 필요한 관세서류 제출 이후 6시간 이내에 인수를 허가하는 규정

* 서면사전고시 제도는 수입업자, 수출업자, 생산자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관세분류 및 원상성에 대해 15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는 규정

- TPP 역내 투자·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진입장벽이 높은 신흥국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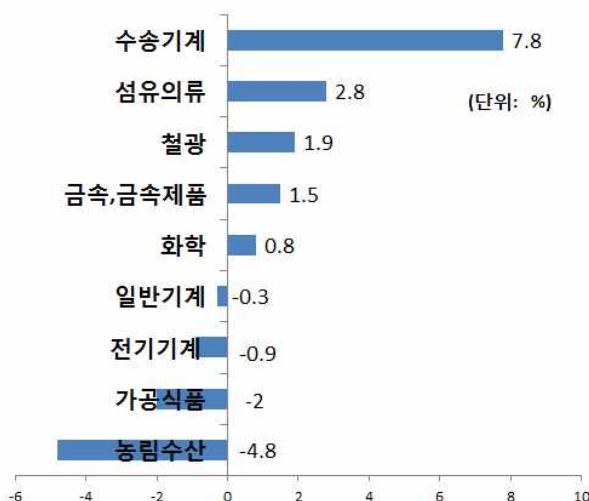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소매유통업에 대한 외자규제 완화조치는 일본 편의점 업체의 해외 사업전개를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

- * TPP 역내국가의 편의점 출점 비율(1점포당 인구비율)이 일본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서, 출점수는 현재 대비 싱가포르 4.4배, 말레이시아 7.0배, 베트남 412배로 증가할 전망
- * 이온은 베트남 현지 2개 업체와 자본제휴를 통해 현지 점포망을 현재 4배 규모인 200개社 증강 계획을 발표(11.5일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TPP가 발효되면 해외기업의 대일투자가 증가하여 일본내 약 80만 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TPP 타결이 일본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수송기계, 섬유 의류에서 긍정적 영향, 농림수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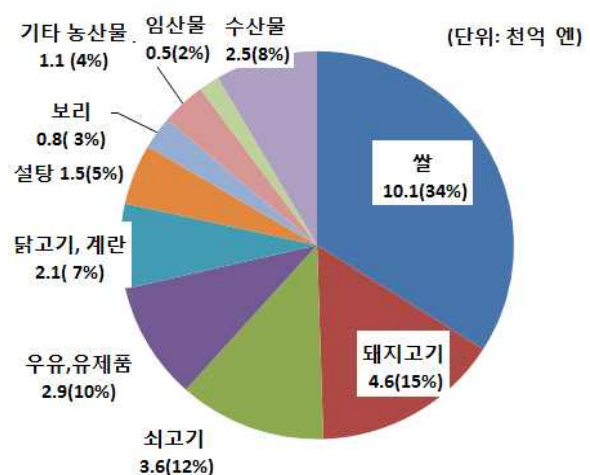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과 트럭에 부과되던 25%의 고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수송기계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 섬유산업의 경우,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제조한 의류를 역수입하는데 부과되던 관세(최대 10%)가 낮아진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TPP 역내 국영기업 보호정책의 완화 및 무역 활성화를 배경으로, 건설업, 상사, 창고업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

<그림 6> TPP 협상 타결이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자료: 永濱利廣(2015). 「成長戦略に不可欠なTPP-締結後の青写真が示す日本の進むべき道-」

<그림 7> TPP 협상 타결이 농림수산물 생산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자료: TPP綜合對策本部(2015.11.25) 「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計算方法について」

□ 한편, TPP 타결로 농림수산물 생산은 전체 3조 엔 규모 감소할 전망

- 쌀(-34%, 1조 100억 엔)의 생산 감소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돼지고기(-15%, 4,600억 엔), 쇠고기(-12%, 3,600억 엔), 우유·유제품(-10%, 2,900억 엔) 순으로 나타날 전망

2. 일본 TPP 대응정책의 주요 내용

□ 11.25일 발표된 일본의 'TPP 정책 대강'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해외전개지원을 주요 골자로 포함

- 일본정부는 10.9일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TPP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TPP 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TPP 정책 대강'을 책정

<표 10> TPP 정책대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新수출대국> TPP 활용촉진	○ 정보제공 및 상담체제 정비 - TPP 보급·계발 -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상담체제 정비 ○ 새로운 시장개척, 글로벌 밸류 체인 구축 지원 -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의 강화 - 콘텐츠·서비스·기술 등의 수출촉진 - 농림수산물·식품수출의 전략적 추진 -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촉진 - 해외전개시 사업환경 정비
<글로벌 허브> TPP를 통한 강한경제 실현	○ TPP를 통한 무역·투자 확대를 국내 경제 활성화로 직결 - 이노베이션, 기업·산업 간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 - 대내투자 활성화 촉진 ○ 지역의 전략을 강화 - 지역 정보발신, 지역자원의 집결·브랜드화
<신농정시대> 분야별 정책	○ 식품안전 - 수입식품 감시지도 체제 강화, 원료원산지 표시 ○ 농림수산업 -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으로 전환(체질강화대책) - 중요 5대품목의 경영안정·안정공급을 위한 대응 ○ 지재권 강화 -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필요 조치, 저작물의 이용원활화

자료: : TPP政策大策本部(2015.11.25). 「総合的なTPP関連政策大綱(案)」

- (新수출대국) '新수출대국 컨소시엄' 창설,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성공

를 60% 달성, '18년 콘텐츠·서비스·기술 수출 촉진, '20년 30조 엔의 인프라 시스템 수주

- (글로벌 허브) '18년까지 외자기업 470社 유치, 관광객 2,000만 명·관광객 소비 4조 엔을 달성
- (新농정시대) '20년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1조 엔('14년 6천억 엔) 달성, 5대 품목 생산자에 대한 경영안정책을 제시

□ 일본정부는 TPP 타결로 인한 농림수산업의 생산감소 효과가 이번 지원 정책으로 상쇄될 것으로 기대

-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은 수출을 위한 생산자의 체질강화 지원정책과 중요 5대 품목별로 관세삭감·철폐로 타격을 입을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

<표 11> 농업 경쟁력강화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정책
농림수산업 체질강화 정책	[수출촉진] 농가 자금 50%를 투입하여 판촉 전략을 수립하는 '체크·오프' 제도 도입, 동식물 검역 협의 촉진
	[축산·낙농] 생산기반강화를 위한 대응 강화
	[소득 향상] 사료, 농업기계의 가격형성 구조 개선
중요 5대 품목 지원정책	[쌀] 수입 증가분보다 많은 양의 쌀을 정부 비축물량으로 매입 - 미국, 호주로부터 年 7만 8,400만 톤의 무관세 수입을 신설 - 비축물량을 2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증강 계획을 논의 중
	[보리] 일본산 보리가격 하락 우려로 경영소득안정대책을 실시
	[쇠고기·돼지고기] 농가 적자에 대한 소득보전제도 법제화, 국고 보전비율 인상, 쇠고기: 80% → 90%, 돼지고기(정부:생산자 부담비율): 1:1 → 3:1
	[유제품] 생크림용 우유 생산자를 보조금 대상으로 추가 [감미자원 작물] 가당 조제품(초콜릿 과자 등)에 대한 사실상의 관세를 설정,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

자료: TPP綜合對策本部(2015.11.25). 「總合的なTPP關連政策大綱」을 토대로 작성

- 일본정부는 이번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관세삭감·철폐로 인한 농림수산업의 생산감소 효과를 축소시켜 줄 것으로 추정
 - 지원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 농림수산물의 생산감소 규모는 기존 추정치인 3조 엔에서 1,300~2,100억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TPP를 활용한 해외전개 지원정책에 집중됨

- (수출 촉진)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JETRO, 금융기관, 대사관,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이 연계된 컨소시엄을 창설·지원 강화
- (활용 촉진) TPP 활용촉진을 위해 상담체제 및 포털 사이트를 정비·강화, 원산지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지원
-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을 위해, 해외 특허출원 및 침해소송 관련 비용을 조성

IV

시사점

- (성장전략과의 연계) TPP 협상을 성장전략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
 - 일본정부는 TPP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그 동안 미진했던 국내개혁(농업, 규제개혁 등), 국제생산 네트워크 효율화,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투자 자유화 등을 정책목표로 수립
 - TPP 타결이라는 외생적 변수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축인 수출확대, 농업개혁, 규제개혁 등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
 - TPP 타결에 따른 관세인하 및 무역원활화·비관세장벽 해소 효과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성화로 연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것으로 기대
 - 우리로서는 메가 FTA 변화 흐름에서 TPP 협상목표와 추진전략을 성장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 (경제효과) TPP의 경제효과는 양자 FTA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제 환경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 일본의 TPP 경제효과는 관세철폐 효과만을 반영하면 3.2조 엔에 불과했지만, 무역원활화와 비관세장벽 철폐효과를 추가할 경우 13.6조 엔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TPP를 통한 일본의 최대 전략은 자국기업들이 GVC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주력
 - 이에 관세철폐보다는 투자·서비스 관련 규제 조화, 비관세장벽 해소에 중점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누적원산지규정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FTA를 활용하여 GVC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
 - TPP 참여는 단일 원산지규정에 따른 절차 간소화, 투자·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환경 개선, 정부조달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신흥국 진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TPP 참여국의 투자·서비스 개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일본은 다양한 업종에서 개방수준이 개선된 베트남 진출을 위해 빠르게 대응 중임. 이에 한국은 이번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일부 유통서비스 및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의 경우, TPP 발효 5년 이후부터 개방수준이 한-베트남 FTA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베트남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TPP에 참여한 신흥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도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마련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TPP 협상 결과 건설, 유통, 금융, 정부조달 분야가 추가로 개방됨에 따라,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이미 발효 중인 FTA의 추가개방을 통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

□ (농업대책) 일본은 TPP가입에 따른 농림수산물 시장잠식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

- 일본은 TPP 협상을 계기로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보호주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을 2020년까지 1조 엔을 달성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
- 우리의 경우에도 농업 지원정책은 피해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강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일본 언론에서는 농업 지원정책은 정책별로 수치목표를 나열하기보다 체질강화를 위해 농지의 대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농지직접 소유 금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제기
- 우리로서는 농림수산물 분야에서 양자간 FTA에서 보호되었던 양허제외·장기철폐 품목에 대한 추가개방을 TPP 협상에서 요구받을 수 있음.
 - 이에 핵심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의 TRQ 신설 방식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전망) TPP 발효는 역내 최소 6개(역내 GDP 85% 이상) 참여국이 국내 비준을 완료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비준완료가 선결 조건
- TPP 참여국 중 미국과 일본은 GDP(IMF, 2013년 기준)의 60.4%와 17.7%를 차지
 - '15.11.5 오바마 대통령은 TPP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였으며 가장 빠른 서명 시기는 '16.2.3로 예상됨.
 - 서명 이후 비준안 발의 시점을 둘러싸고 '16.11월 대선 전까지 발의가 어렵다는 전망과 '16년 상반기 비준을 시도할 것이라는 두 가지 전망이 상존하나 16년 중으로 비준이 예상됨.
 -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에 따라 협정 서명 최소 90일 전에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보해야함
 - 일본정부는 '16년 2월 협정 서명을 목표로 '16년 1월 4일 소집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
 - TPP 발효까지 2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산·학·연 TPP 전문가로 구성된 'TPP 전략포럼'을 통해 TPP 대응전략, 협정문 주요이슈, 우리 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



작성자

◆ 통상전략팀	김은지
◆ 통상전략팀	이주미



Global Market Report 15-062

일본의 TPP 협상 결과와 대응정책 분석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